지방자치실천포럼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11

November 2014 | vol.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지방자치실천포럼
–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포럼 위원 토론 요약

특별대담
– 강원도 미래동력 100년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이달의 Issue
– 통일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 통일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04 **지방자치실천포럼**

–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포럼 위원 토론 요약

12 **특별대담**

– 강원도 미래동력 100년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23 **논단**

–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교류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 독일 통일과정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례 및 시사점





33 **국내·외 우수사례**
– 통일의 희망을 여는 길,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
–평화누리길
– 통일 후 군사지역의 재생에 대한 고민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Freiburg Vauban)마을 사례

44 **지방자치단체 탐방**
– '전통'과 '미래'를 잇는 내포(內浦)의 중심도시 홍성

50 **연구원 동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천포럼 통권 제64호 / **발행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 **편집위원장** 금창호 **간사** 전대욱 **위원** 주재복 윤영근 김도형 김성주 **담당** 탁영지 / **연락처** T 02·3488·7300 F 02·3488·7309 / **홈페이지** www.krila.re.kr /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 본 지방자치실천포럼은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자치실천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은 지난 2013년 6월 26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자치실천포럼」을 창립하였다.
『지방자치실천포럼(공동대표 : 박재창 교수, 이승종 원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포럼 목적
-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재고
- 지방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철학의 공유 및 실천적 대안 논의
- 지방 현안과재에 대한 관-학-연간 소통 및 대안모색 기회 확대

■ 포럼 구성
- 공동 대표 :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이승종(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정부(중앙, 지방)-학계-연구원 등 55인의 인원 구성
- 구성 원칙 : 지방자치 관련 학(행정학, 재정학, 지방자치 관련 주요 학회 및 대학, 언론 등)-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협의회)-연(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계에 의한 지방자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중기 발전 모델 :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며 지역순회를 통한 국민 담론의 장으로 발전

■ 기조연설
- 1회 :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지방자치의 과제(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2회 :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추진전략(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 3회 : 국민행복시대의 지방자치(김동완 국회의원)
- 4회 : 다원주의적 지방거버넌스의 진화(이달곤 전 안전행정부장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5회 :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외 & 어떻게(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
- 6회 :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발전정책(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 7회 : 지방자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8회 :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시대를 열자(김문수 경기도지사)
- 9회 : 지방자치, 새로운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 10회 : 지역발전, 환경문제 그리고 국민행복(윤성규 환경부 장관)
- 11회 : '국가개조'와 지방자치(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 12회 :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13회 : 국가와 지방의 재정협력(박재완 前 기획재정부 장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세계 경제와 우리의 대응

지금 한국은 구조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성장 기조와 사회통합의 저하로 정리되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본 후에, 사회통합 저하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민간부문 부채비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부채감축이 불가피한데, 부채감축은 곧 구조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과 부채감축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보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선진국들의 민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부채도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니 세금은 줄어들고, 모든 국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대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민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부채까지 대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와 사회통합의 저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저희 연구원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국민들은 정치 15%, 부정부패 11%, 불공정행위 5%로 응답했습니다. 사회통합의 저하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이동성 저하, 소득불평등도 증가, 세대 간 ·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이동성(본인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내용입니다. 세대 간 격차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연구원 김희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다”라는 설문에 장년층은 70% 이상이 동의한 반면, 청년층은

50%만이 동의하였습니다. 노력의 성과에 대한 청년층의 회의감이 증대되고, 청년층과 장년층이 상이한 가치관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이 저하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인구 고령화입니다. 한국의 노인부양비율은 국제적인 추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의 연공성 등에 기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출되어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공식 은퇴연령과 실질 은퇴연령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투자 및 고용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반도체 등의 고기술 산업군 역시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률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반인 조선·철강·석유화학 부문 역시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보는데, 좀비기업의 비중이 평균 14%(제조업 10%, 서비스업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입규제와 낮은 청년고용률입니다. OECD 국가군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청년고용률은









낮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살률 증가, 소득분배 악화, 계층 간·지역 간 격차 증대 등으로 인해 한국의 갈등 수준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즉 거버넌스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갈등 해소 역량의 강화,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의 선진화라고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구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신뢰가 빨리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지방자치실천포럼에 참석한 리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로는 규제개혁,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 생태계 조성,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조적 인력 양성과 사회이동성 제고, 재정지출의 내실화 추진 등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화된 정책목표 하에 기획·점검·평가를 실시하는 S.M.A.R.T 방법론(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을 활용하여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오철호 한국정책학회장



규제개혁이나 기업가 정신 함양과 같은 정책 대안들은 이번 정부만이 제안했던 대안은 아닙니다. 많은 정부가 국가 혁신과 경제체제 개선의 차원에서 이런 대안들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역시 비슷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은, 대안들이 작동하지 않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유사한 대안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립된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정책이 만들어지지만,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책에 대한 목표치를 먼저 만들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송숙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규모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동안 통과율이 68%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 어떤 지역의 SOC 투자가 늘어날수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재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SOC 투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활성화된 오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내년도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와 재정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전망이 매우 좋지 않고, 지방재정도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예산 세출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경제전망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7% 정도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봄에 전망했을 때 4.0% 정도로 보았으나 요즘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낮춰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금년도와 비슷하거나 금년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성장률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경상성장률입니다. 세금은 경상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전할 것이고, 세출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진광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주식투자를 할 때 “계란을 한 광주리에 담지 말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분권의 중요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부문에는 경제 분권화가, 공공 부문에는 재정 분권화가 시급한 지금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소진광 회장님께서 해주신 조언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 미래동력 100년
– 강원도지사에게 듣는다 –

일시 및 장소 / 2014.11.18.(화), 강원도지사실
인터뷰 대상 /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진행 /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종 원장 : 민선6기 재선에 성공하시고 도정 운영에 대한 각오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각오로 강원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최문순 지사 : 도민 여러분께서 민선 5기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시고, 민선 6기를 다시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강원 도민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모든 정책결정의 최고 기준은 강원도민의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소속 정당, 학연, 지연 등 모든 계파를 떠나 오직 강원도민을 위해 도정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 6기 강원도정 역시 비전은 민선 5기와 동일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추진 중인 도민들과의 약속사항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민선 5기를 통해 잘 준비한 토대를 기반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성과를 이뤄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바뀐 것이 있다면, 강원도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준비를 통해 강원 미래 100년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적인 기회를 통해 강원번영을 이룰 것이며, 강원도 번영은 곧 도민의 이익과 행복으로 직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승종 원장 : 민선6기 최문순 지사께서는 '강원중심 5대 비전'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제시하면서 「2014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공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도정 철학과 가치가 명확히 제시되었고 지역 현안별 이해도가 충분하고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었다는 평가인데요. '강원 중심 5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문순 지사 : 선거를 치루면서 '강원중심 5대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사 오고 싶은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올림픽 성공으로 세계 중심이 되는 강원도, 통일의 중심이 되는 강원도, 북방시대의 중심이 되는 강원도,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더하여,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강원 도약 4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강원 도약 지표(도민소득 3만 달러, 복지재정 비율 33%)를 설정하였고, 중점 추진 전략으로 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전 시군 상생 발전, ② 도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③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 구현, ④ 세계 속의 강원도 브랜드 위상 제고, ⑤ 첨단 전략산업 우위 선점, ⑥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강원도를 재도약시킬 것입니다.



▲ 평창 ICT 동계올림픽 구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강원도 간 업무협약 체결식

《 강원 도약 도정지표 》

❖ 도민소득 3만 달러 달성

- 1인당 GRDP 2배 성장
- 10만 개 이상 반듯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60% 이상 달성
- 수출 50억 달러 및 관광수입 4조 5천억 원 달성
- 인구는 과거 25년간 150만 명대의 벽을 깨고 160만 명 돌파

❖ 복지재정 33% 달성

- 복지재정은 도 전체예산의 33%(1조 3천억 원 이상)까지 확대
- 도시가스 보급률(LPG 소형저장탱크 포함) 52%까지 증대
- 자살률을 십만 명당 15명으로 대폭 감소
-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2배 이상 확대 및 의료원 경영정상화로 이용자수 증가

❖ 6대 중점 추진전략

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전 시 · 군 상생 발전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올림픽과 연계한 지역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도민소득 향상과 전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음

② 도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과 기업유치 확대를 통해 일자리와 도민 소득을 늘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역자원의 생산 · 유통 ·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③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 구현

강원도가 열어가는 수요 응답형 행복전략으로 마을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 생산부터 복지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강원도를 구현

④ 세계 속의 강원도 브랜드 위상 제고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세계산불총회 등 세계적인 행사를 계기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동북아 중심지로 성장시켜 나가겠음

⑤ 첨단 전략산업 우위 선점

의료기기, 나노바이오 등 강원도가 선점하고 있는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2018년까지 도내 제조업 생산기반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겠음

⑥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의 중심지 건설

새롭게 대두되는 북극항로 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남북경제 협력과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북방경제를 선도해 나가겠음

이승종 원장 : 그렇다면 민선 5기와 6기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최문순 지사 : 민선 5기 3년은 그간 강원도에 산적한 현안을 정상적인 궤도 위에 안착·안정화 하는 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민선 6기에는 민선 5기를 통해 마련한 기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특히 동계올림픽과 경제 성장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올림픽을 유치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대부분의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도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마련에 전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밖으로 진출해서 획득해 오는 도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인구, 산업구조 등 우리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도정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우선 글로벌 역량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관광객 유치 등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과 복지, 성장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르신 건강카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등 직접적 복지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승종 원장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선 6기는 강원도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키울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겨울 스키시즌 관광객 유치 서울 캠페인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명예도지사 위촉

최문순 지사 :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타 지역의 선도 산업을 뒤쫓기에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나노바이오 등 우리 도가 선점하고 있는 첨단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나노바이오 기술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과 비철금속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 메디컬 허브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의료기기 수출단지 지원,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 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과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고소득 농축수산품 중점 육성과 6차 산업화로 고도화 추진,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귀농인 정착지원금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경제의 자립과 지속성장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강화하고, 지역통화유통사업, 사회적 경제 레거시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종 원장 : 최문순 지사께서는 지난 10월 7일, 민선6기 취임 100일을 맞이한 기자간담회에서 '트러블 속에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문순 지사 : 지금 강원도는 600년사에 없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코리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발판으로 민선 6기의 새로운 정책을 세심하게 더하여 2015년도에도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국비 목표액 5조 7천억 원을 초과 달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해결해야 하는 큰 현안들을 안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잘 극복한다면 강원도는 600년사에 다시 없을 일비충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민선 5기 3년 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고 민선6기에는 이를 성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승종 원장 :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근거법과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재정(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적정수준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어야 지방자치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최문순 지사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최문순 지사 :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단순 업무 이양이 아닌, 지역 중심의 중앙과 지역 간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뺀 모든 권한이 지역에 이양되어야 하며 우선,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조직권, 인사권 등 실질적 제도의 변혁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절실합니다. 각 지역은 나름의 특색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일률적 정책시행으로 17개 시도를 재단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최근 기초연금법 시행 등 복지시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세수확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우 과다·장기간 감면이 많아, 감면의 고착화·기득권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국세 대 지방세비율인 8대 2에서 6대 4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부세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 강원도이전기업협의회 간담회

이승종 원장 : 지방자치를 일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 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민선6기 추진계획에서 밝힌 내용 역시, 마을단위의 자치능력 향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최문순 지사의 지방자치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문순 지사 : 나치가 패망한 뒤 독일에서는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도 제기됩니다. 이에 독일인들은 쾰른이라는 작은 도시에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쾰른 기본 강령'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이유, 정치의 역할, 경제에 대한 기본 방향, 가족의 중요성, 지역자치에 대한 확고한 태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쾰른 기본 강령'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인간은 존엄하기에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민주주의는 이러한 기본 바탕에서 사람과 사람사이가 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밑바탕으로 합니다. 즉, 언제나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또 함께 토론하고 더불어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며 자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자치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주민자



▲ 제 6회 전국새농민회강원도회 한마음전진대회

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회 실시,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중입니다.
우리 도는 자치여건을 조성하여 도민의 자치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지역의제 해결능력 배양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며 자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민의 자치를 위해 강원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강원 인권지킴이단 인권교육

이승종 원장 :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북방경제시대, 통일한국시대를 앞둔 강원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리더십에 대한 도민들의 갈망이 클 것입니다. 학문적, 이론적 리더십이 아닌 최문순 지사 본인만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문순 지사 : 제가 도정에 임하는 철학은 첫 번째,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치 철학입니다. 서구 복지국가의 철학적 토대인데 이는 국가의 존재이유, 정부의 존재이유, 강원도정의 존재이유에 근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가치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모두가 존중하는 강원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화와 번영입니다. 강원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적 번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도정의 정책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를 이뤄 낼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치 철학은 움직일 수 없는 저의 철학이자 정치적 비전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것처럼 도정도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복지국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소득, 복지, 교육, 문화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기조로 도정을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리더란 탈권위의 부드러운 리더로 모든 사람들의 창의를 적극 살려가는 것입니다. 도민을 가장 높은 분들로 모시고, 저는 낮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도지사실과 관사를 개방하고 행정정보, 예산 등을 널리 공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청을 창의적 · 자발적 · 진취적인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승종 원장 :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KBS춘천방송을 통해 도민 100여 명을 모시고 '민선6기, 다시 뛰는 강원도!'라는 주제로 TV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도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향후 4년간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 : 요즘 유행하는 소통이란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위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억지로 소통을 하겠다고 소통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통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소통입니다. 수직적 권력, 위계질서를 깨는 것, 그것이 소통입니다. 누구나 서로 쉽게 다가가서 말 걸 수 있어야 그게 소통인 것입니다. 즉, 평등한 인간관계가 소통입니다.
현장에 나가 도민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도민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 도지사로서 당연한 일이고 제가 도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7월,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취임식 대신 도민들과 TV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도민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제 이야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민선 6기를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포부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이뤄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클럽 창단식

앞으로도 도민들을 많이 찾아가 뵐 예정입니다. 저는 평생 현장주의자로 살았습니다. '현장에 신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그것이 우리 현실과 유리되지 않

도록 노력합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미처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누락될까봐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 또 도민들이 하시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문제들을 직접 소통하고 제가 보고 답변 드리면서 늘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종 원장 : 최문순 지사께서는 오직 강원! 강원도와 도민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 온 힘을 다해 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발전, 도민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청사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 : 기업과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 도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0년도 당시 도민 1인당 소득이 1만 6천 달러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만 개 이상의 반듯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60% 이상 달성, 수출 50억 달러 및 관광수입 4조 5천억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 인구는 과거 25년간 150만 명대의 벽을 깨고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 산업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31조 4천억 원-전국대비 2.5%입니다. '08~'12년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3.8%로 전국 5.3%를 기록하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광업) 매출액은 11조 6천억 원-전국대비 0.8%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년을 통해 마련한 대규모 프로젝트 '동계림픽 관련 투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 'SOC 확충', '레고랜드 개발' 등을 통한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른 자본 및 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나노바이오, 비철금속, 플라즈마, 에너지 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견기업을 다수 유치하는 등 산업 구조 고도화 중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한 앵커기업 유치, 중소기업 연쇄 유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본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승종 원장 : 마지막으로 민선 6기 소임과 강원 도민들께 드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 : 도민 여러분께서는 강원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4년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동계 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과를 주민의 소득, 복지 등으로 반드시 연결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저를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들을 위해,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강원 도정이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선택과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교류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렇다면 통일은 미사여구의 선언적 의미로 끝나기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통일대비 남 ·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 동안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 온 교류협력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사상누각이거나 아니면 설명력이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교류협력은 필드, 즉, 현실적인 토양을 근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 자신은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귀납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남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그리고 제주도 등)가 북한과의 교류협력한 내용이나 결과물을 갖고서 새로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첫째, 남한에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틀 속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상대적 자율성을 향유하면서, 예컨대 조례도 만들고 등등,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물론 안전행정부와 협의)이 있다. 반면 북한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당 조직, 즉, 공산당 조직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만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동질성 회복, 상호간의 신뢰 구축, 민족통일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의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과연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교류협력 주체는 우리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있으며,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의회(범태),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민족화해협력연합회(민화협) 등이 창구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남쪽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카운트파트로서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지방인민위원회)가 이들을 대신하여 남함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교류협력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로 등장하고, 반면 북한은 공산당의 하부 기구를 상대하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민족의 동질성 회복,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2. 기존의 교류협력 내용 검토

1) 강원도

첫째,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기본 요소들, 즉, 제도화로 가기 위한 자치단체 나름의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담당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는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강원도는 1989년 9월 도 기획관리실에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을 설치하고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기구의 설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어서 남북강원도협력협회(2000년 4월), 북강원도연구센터(2000년 6월)를 설립하였다.

또한 강원도 도지사가 2000년 12월 16일~20일까지 북강원도와 평양을 공식 방문

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이며, 남북 강원도지사(북한은 인민위원회 위원장)가 처음으로 만나 자치단체 간 남북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논의 결과 남북강원도 간에는 5개항의 기본합의서와 3개 협의서(금강산 솔잎 흑파리 공동방제사업, 어린연어 공동 방류사업, 씨감자원종장건설 등)가 체결되었다.

둘째, 재원확보이다.

강원도는 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도예산과 기금모금 등에 의존하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이다.

하나, 남북 어린연어 공동방류사업이다. 북한의 경우는 아직 연어를 부화하고 방류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2001년 4월 7일 강원도에서 생산된 어린연어 55만 마리를 북한에 수송하여 북강원도 고성 남강과 안변 남대천 두 곳에서 방류하였다. 공동방류행사는 강원도청 수산관계자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북강원도 양어관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금강에서 가까운 후천강에서 이루어졌다. 연어방류사업은 2006년까지 이어졌다.

둘, 금강~설악 솔잎흑파리병에 대한 공동방제사업이다. 강원도가 방제약품과 기자재를 지원하고 북측은 인력을 투입하여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2001년 4월 7일 북측과 실무협의 당시 2001년 6월 초에 금강산 지역에 방제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여러 차례의 서신교환을 통해 공동방제에 대한 세부절차,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셋, 씨감자원종장 건립과 기술협력사업이다. 씨감자원종장 건설은 국내 씨감자의 93%를 점하고 있는 강원도가 시설자재와 기술을 지원하고 북한 측이 인력을 투입하여 북강원도 지역에 씨감자 생산시설을 갖추어 안정적인 씨감자 공급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다.

2) 경기도

경기도는 매년 40~60억 원을 자체 출연하여 2002년 양강도에 농기계(경운기) 200대를 보내고 지붕개량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3년 도 기획관리관의 방북에 이어 2004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경기도 남북교류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 민화협(민족화해협력연합회) 측과 평양시내 곡성공단 내에 1일 2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당면생산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운기 100대와 농기계 소모품을 황해북도 사리원시 협동농장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리원시 구강예방원에 치과장비 5세트, 24인승 환자수송용 버스 5대 및 치관 관련 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3) 전라남도

전라남도 대북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시·군·구별로 2,000~3,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2004년 1억 3천만 원을 대북교류협력사업예산으로 확보하였다. 현재까지 전라남도의 대북 지원실적은 평안남도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을 비롯하여 농기계, 콤바인 등을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를 통해 지원하였다.

4) 전라북도

우리민족서로돕기와 공동으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과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지원을 위해 약 15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2004년 3월에 전라북도 부지사가 북한을 방문, 북한의 민화협과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5) 충청남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에 북한 참여 추진, 2002년 전국체전의 남북공동 성화채취 등을 추진하고자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되었다. 또한 2002년 북한의 황해남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여 추진 자체가 무산되었다.

6) 부산광역시

2003년 8월 시장을 포함하여 부산시 북한교류협력단이 평양을 방문, 부산지역산업 생산의 특성을 살린 신발과 섬유, 수리조선, 수산, 항만건설 및 운영분야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민화협과 협력의정서를 교환하였다.

7) 제주도

2000년 6. 15 정상회담 이후 제3차 남북정상급 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으며, 백두산과 한라산 교차관광이 장관급 회담의 합의사항으로 정해질 만큼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그 외에도 제주도는 1998년부터 4년 간 13,572톤의 감귤과 당근 6천톤을 국제적십자 연맹을 통해 북한에 보냈다.

3. 나오는 말 : 고려해야 할 요인

강원도를 포함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그리고 제주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인민위원회에서 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있지 못하다. 강원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합의서 및 협의서를 강원도와 북측의 민족경제련합회 개선무역총회사 간에 체결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에 전문화된 대남 사업기관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화창구를 개설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첫째, 남·북한 간의 새로운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귀납법의 방법으로 새로운 교류협력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선행 연구의 검토 없이 남북한 자치단체의 새로운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를 제외하고 타 시도의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그 동안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양강도에 농기계 지원, 그리고 평양 곡성공단에 당면 생산시설을 지원하였다. 전라남도는 평안남도 대동군에 농기계 수리공장을 지원했으며, 전라북도 역시 황해남도 신천군에 농기계 수리공장을 건설해 주었다. 충청남도는 황해남도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부산광역시와 제주도는 북한 당국, 즉, 민화협 같은 기구와 협정서를 맺어 교류협력을 실시하였다. 이런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북한과 일관성을 갖고 교류협력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사례 및 시사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3.0지원센터 소장

1, 교류협력의 전개과정

남북한의 통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일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통일 이후의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서독의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은 독일분단 직후부터 양측이 제기하였음에도 1985년 말에 와서야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였고, 전체의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1950년부터 1969년까지로 동독이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의한 시기이고, 제2단계는 1969년부터 1985년까지로 종래와 달리 서독이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이며, 제3단계는 1985년부터 통일까지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이 실제적으로 성사되는 동시에 확산된 시기이다.

제1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주로 동독이 서독 측에 도시 간 자매결연을 제의하였다.

동독은 할슈타인 독트린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동독의 법적 지위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독의 도시 간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시 간 자매결연을 국제적 교류의 제도화된 형식으로 간주한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시 간 자매결연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후 제2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종래와 달리 서독에서 적극적으로 도시 간 자매결연을 동독에 제의하였다. 서독은 1972년 제정된 「동 · 서독 기존조약」과 독일정책의 기본노선 변화에 따라 본격적으로 동독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① 서독은 동독의 국적권을 인정할 것, ② 서독 잘쯔기터 소재 동독 정권의 범죄행위 기록보관소를 철폐할 것, ③ 양독의 상주 대표부를 대사관 지위로 변경할 것, ④ 동서독 국경에 국제법을 적용할 것 등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이유로 서독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서방국가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제3단계에 해당하는 1985년 이후부터는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이 고착상태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추진된 동시에 통일까지 다수의 도시 간 자매결연이 체결된 시기이다. 동서독 도시 간 최초의 자매결연은 1986년 10월 자알루이스(Saarlouis)와 아이젠휴텐슈타트(Eisenhuttenstadt) 간에 체결된 것이다. 이후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까지 62개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 성사되었다.

2. 교류협력의 제반개요

1) 교류협력의 목적

전술한 바와 같이 동서독 도시의 교류협력은 초기에 동독이 그리고 다음에는 서독이 각각 추진의사를 제기하고, 결국 1985년부터 본격적인 성사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동서독 도시의 교류협력에 대한 양독의 입장이나 목적은 각기 달랐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교류협력에 대한 양 독일정부의 입장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 바, 내독관계를 비롯한 독일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그 입장과 목적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도시의 교류협력에 대해 서독이 표방한 목적은 양독 주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내독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는 통일의 당위성을 명시한 서독 기본법뿐만 아니라 독일정책의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며, 특히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인적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상기와 같은 목적 이외에도 서독이 도시의 교류협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면적 의도가 있었던 바, 대부분의 서독 도시들이 동독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해당 도시의 위신을 고양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서독과 달리 동독은 내독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내적 불만을 개방 없이 해소하려는 것으로 일종의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동독은 교류협력을 "세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내독 관계를 국제법적 관계로 접근하여 서독의 동독 인정을 강요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서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며, 대내외적으로 동독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특히, 동독이 도시 간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한 것은 상기와 같은 목적들이 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2) 대상도시의 선정

동서독 도시의 교류협력에서 대상도시의 선정은 대체적으로 동독정권의 고위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서독의 도시들이 교류협력 신청 시에 직접 대상도시를 지명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독 측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동독이 결정하는 교류협력 도시 선정의 경향은 교류협력 초기에는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서독의 도시들과 특히, 중 · 대도시를 대상도시로 하였다가 1988년 3월 이후부터는 점차 소도시도 대상도시로 선정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8년 7월 현재 서독의 대상도시의 분포를 보면, 사민당 집권도시 41개, 기민당/기사당 집권도시 15개, 자민당 집권도시 1개, 무소속 집권도시 5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별 대상도시 분포에서도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주 10개 도시, 바덴 · 뷔르템베르그 주 9개 도시, 자알란트 주 8개 도시, 라인란트 · 팔츠 주 7개 도시, 바이에른 주 6개 도시,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6개 도시, 헤센 주 4개 도시, 브레멘 특별시 2개 자치시, 함부르크 특별시 2개 자치시, 서베를린 특별시 2개 자치시 등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동서독 도시 간 교류협력에서 대상도시의 선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 단순한 신청보다는 동독 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나 경제 분야 거물급 인사가 주선하는 경우이고, 둘째, 트리에나 부퍼탈과 같이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동독 측 고위인사가 먼저 자매결연을 제의한 경우이며, 셋째, 동독 도시가 먼저 서독 도시에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이는 동독정권의 결정이

간접적으로 전달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도시 간 교류협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명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일반적으로 도시 간 교류협력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관련성 내지 인구규모의 유사성 등의 공통점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서독 도시 간 교류협력은 대체적으로 동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대상도시가 결정됨으로써 뚜렷한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결국 도시 선정을 위한 동독의 특별한 기준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서독 측 도시들도 특정한 동독의 도시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 교류협력의 내용

동서독의 교류협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한 분야는 제한적이다. 교류협력의 효과가 나타난 대표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교류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문제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기 위하여 시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비롯한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둘째, 체육교류로 볼링대회와 축구대회 및 탁구대회 등과 같이 일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청소년 교류로 대부분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서독 청소년들이 단체로 동독의 자매도시를 방문한 후 이에 대한 동독의 답방이 이루어진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가장 보편화된 자매결연 사업이기도 하였다. 넷째, 평화문제 관련 모임으로 평화의제는 대부분의 자매결연 조약문에 포함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주로 동독의 요구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서독은 의무적 참여 수준에 그쳤다. 다섯째, 문화교류로 동서독 도시 간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번갈아 개최하였으며, 전람회와 무용발표, 영화상영 및 문학가 모임 등이 포함되었다.

3. 시사점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서독 교류협력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상호간 국익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지만, 서독이 양보를 통한 사실상의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과 남한이 직면할 상황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보내며, 언제나 타협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장기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도시 대표단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교류협력에 소극적 자세를 나타낼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과도한 접근은 북한의 경제적 대가요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남한도 가급적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되, 북한의 수요 태세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인 추진력으로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부터 과도한 기대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계획 및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며,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북한행정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교류협력의 목적 및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상도시의 선정에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 ·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교류협력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를 완비하고 국가의 지원내용을 체계화하며, 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희망을 여는 길,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평화누리길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 연구원

청정자연이 숨 쉬는 길, 감춰진 문화유적지를 만나며 답사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 비무장지대(DMZ:De-Militarized Zone) 인근의 평화·안보·생태·역사관광지를 연결하며 만들어지고 있는 '평화누리길'이 바로 그것. 민간인통제구역에 길이 놓이다보니,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평화누리길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와 관련 지자체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길이다. 자연생태 및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명소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접경지역 10개 시 · 군을 대상으로 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임도 또는 군용도로 등 기존에 있는 길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 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1]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 철책선을 따라 평화누리길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경기도 김포시 구간)

자료: 경기관광공사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 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이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의 범위는 모두 15개 시 · 군으로 설정되는데, 이들 시 · 군 가운데 평화누리길이 경유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의 공간적 범위

유형 구분	해당 지역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 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강원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 군	• 경기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 : 춘천시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 경기 :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

자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해당 법률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각각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과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 군의 경우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시 · 군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 군의 경우 고양시가 포함됨으로써 모두 10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한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 시작해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 · 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기까지 155마일(약 250㎞)의 군사분계선(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으로 각각 2㎞씩 남방한계선(SLL :Southern Limit Line)과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 사이에 4㎞ 폭을 갖는 군사적 완충지대를 말한다. 동서 이념의 갈등이 만들어낸 DMZ는 냉전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지만, 동시에 '60여 년이 지나도록 사람의 발길이 멈춘,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리고 DMZ의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 떨어진 곳으로 흔히 '민통선'이라 불리는 민간인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경계선에서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에 해당하는 민간인 통제구역은 이름이 갖는 의미 그대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오랫동안 사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청정자연의 모습을 간직할



자료제공: 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연도별 추진 현황(2010~2014년)

단위:㎞

연 도	지역 및 구간			노선길이
2010년	• 3개소			17.2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 구간	9.4
		화천군	평화의 댐 구간	6.9
		고성군	북천철교 구간	0.9
2011년	• 6개소			44.6
	경기도	강화군	초지대교 구간	1.3
		파주시	통일동산 구간	11.6
		연천군	신탄리역 구간	8.4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역 구간	12.0
		양구군	두타연 구간	7.4
		고성군	동해안 해변 구간	3.9
2012년	• 4개소			70.7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 구간	19.8
		파주시	임진각 구간	13.5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구간	32.4
		고성군	화진포 구간	5.0
2013년	• 4개소			71.3
	경기도	김포시	염화강 구간	30.7
		연천군	임진강 구간	15.0
	강원도	철원군	근대유적 구간	10.0
		양구군	돌산령 구간	15.6
2014년	• 4개소			62.5
	경기도	김포시	철새탐방 구간	22.7
		파주시	임진강 적벽 구간	10.2
		연천군	숭의전 구간	21.6
	강원도	철원군	화강 구간	8.0

자료:안전행정부 지역발전과 내부자료(2014)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생태 · 경관자원이 수려한 의미 있는 이 공간에서 평화누리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자연을 만나는 길이고 자연과 대화하는 길이며 자연과 함께 걷는 길이라 말할 수 있겠다.

2009년 12월에 발표된 「남북교류 ·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의하면 애초에

이 길은 자전거길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2011년 7월에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도보여행길과 자전거길이 혼합된 형태로 구상되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 길은 지역 명소와 연계한 친환경 도보 및 자전거 트레킹 코스로 조성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공모 후에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평화누리길의 연장길이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51㎞로 계획돼 있는데, 이 가운데 2013년까지 조성 완료된 구간과 2014년 현재 조성 중인 구간이 각각 315.9㎞와 62.5㎞로 올해 말까지 378.4㎞의 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남는 구간인 172.6㎞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변 관광명소와의 연계, 자전거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길과 길 사이의 연결 사업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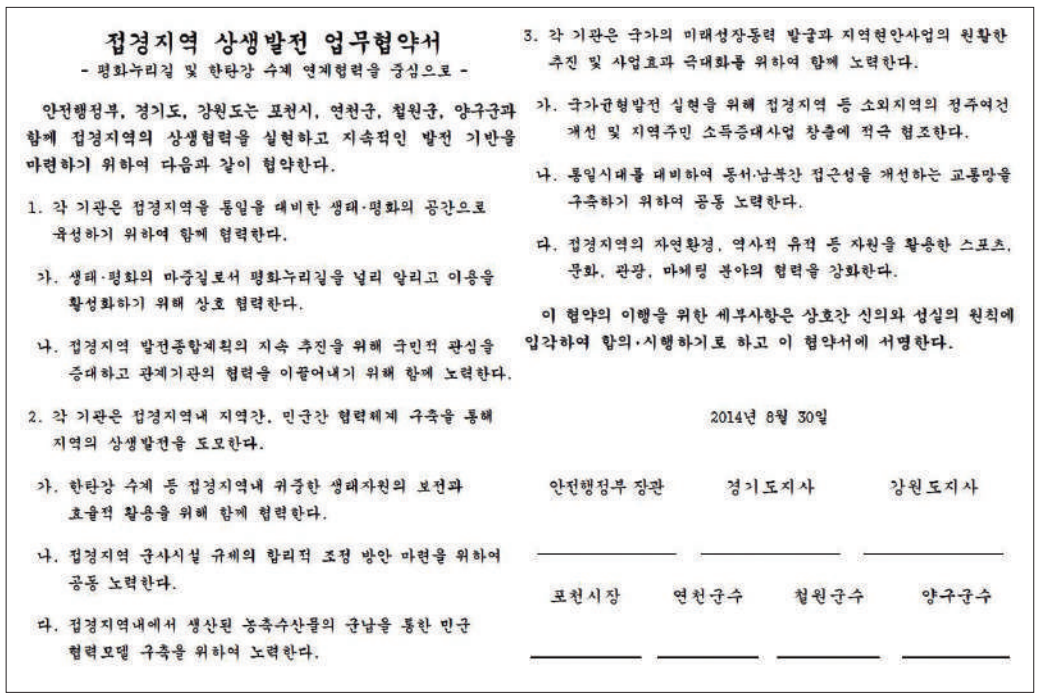
한편 지난 8월 말에는 2010년 처음으로 개통된 평화누리길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양구군의 두타연 구간에서 안전행정부, 경기도, 강원도 공동으로 걷기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 구간은 금강산에서 흘러오는 계곡 주변에 형성된 길로,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전된 아름다운



▲ 숲길 따라 평화누리길을 걷는 시민들의 모습(경기도 연천군 구간)

자료: 경기관광공사

숲길'로 평가받는 장소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양구군 등 7개 기관이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아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는데, 이 협약에는 평화누리길의 명소화,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유하는 한탄강 수계에 대한 협력 강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평화누리길 조성을 위한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이 증진되고 길과 길 사이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서

- 평화누리길 및 한탄강 수계 연계협력을 중심으로 -

안전행정부, 경기도, 강원도는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양구군과 함께 접경지역의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각 기관은 접경지역을 통일을 대비한 생태·평화의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한다.

가. 생태·평화의 마중길로서 평화누리길을 널리 알리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국민적 관심을 증대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각 기관은 접경지역내 지역간, 민군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가. 한탄강 수계 등 접경지역내 귀중한 생태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나.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다. 접경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군납을 통한 민군 협력모델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기관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접경지역 등 소외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창출에 적극 협조한다.

나.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동서·남북간 접근성을 개선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다.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역사적 유적 등 자원을 활용한 스포츠, 문화, 관광, 마케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의·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14년 8월 30일

안전행정부 장관 _____

경기도지사 _____

강원도지사 _____

포천시장 _____

연천군수 _____

철원군수 _____

양구군수 _____

자료: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4년 8월 30일), "상생의 동행, 평화누리길을 함께 걸어요"

평화누리길을 걷다보면 들판에선 농민이 농사짓는 모습을, 포구에선 어부가 고기잡는 정겨운 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철책을 따라 걸을 때면 철책 너머로 DMZ의 생태경관을, 그리고 그 너머에는 북녘 땅의 산하(山河)가 펼쳐진다. 초소와 방공호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물을 만나다 보면 마음 한편에선 분단국 현실의 아픔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때 묻지 않은 비경(秘境)을 감상하며 통일시대를 희망하게 되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을 마음으로 전달받기도 한다. 아마도 자연 그대로만큼

마음에 위안을 주는 풍경은 그 어디에도 없으리라. '나'란 존재는 자연에서 왔기에 내면 깊은 곳에 자연이 숨 쉬고 있으므로.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들고, 자연의 비밀과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평화누리길을 거닐며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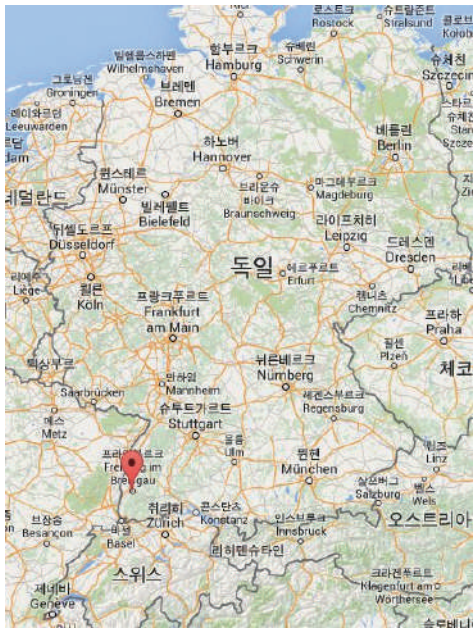
통일 후 군사지역의 재생에 대한 고민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 (Freiburg Vauban)마을 사례



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수석연구원

독일 남부의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 원전건설 반대운동 이후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변화를 통해 친환경 분야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어 왔다. 프라이부르크에는 보봉(Vauban)이라는 독특한 마을이 하나 있다. 보봉마을은 프라이부르크 도심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5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와 접경지역인 이곳은 1992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이었던 프랑스군 주둔지였다. '보봉'이란 지명 역시 프랑스 군의 주둔을 위해 이곳을 설계한 프랑스 건축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1992년 프랑스군이 철수한 후, 1995년에 프라이부르크시는 프랑스군이 주둔했던 38hr 규모의 철군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을 모았는데, 이에 자발적 시민모임인 '포럼 보봉'이 탄생하였다. 포럼 보봉은 주거, 교통, 에너지, 공동시설 등 주제별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전문가가 영입되어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도심에 근접해 있는 매력적인 보봉마을의 주택단지는 주민참여, 건축공동체 그리고 친환경적인 생활 등이 어우러져 있다. 저에너지 건축방식은 의무이고,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태양에너지 기술 등은 이 마을에서는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옛 프랑스군의 숙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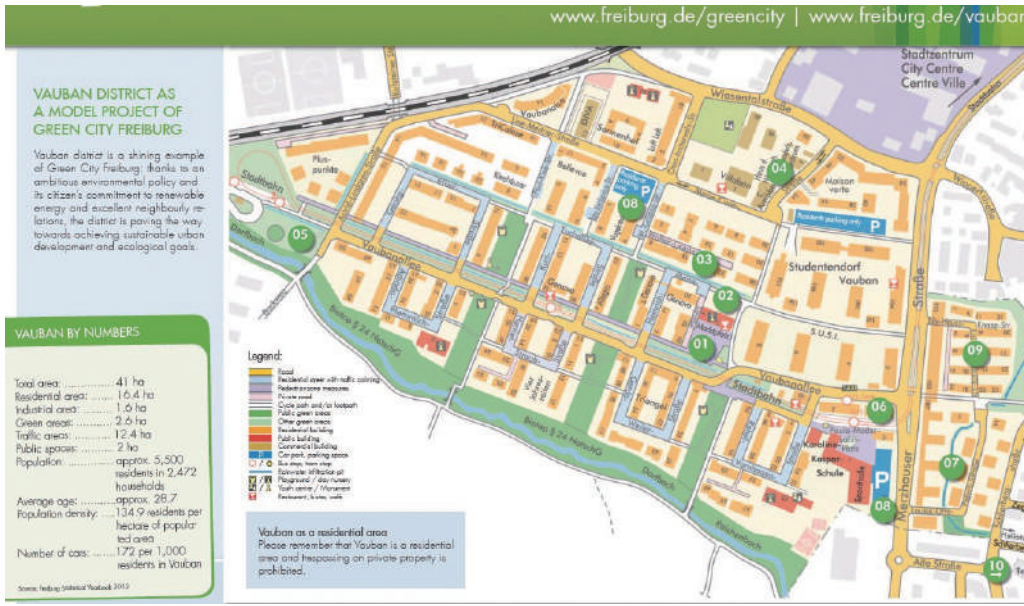


개 · 보수하여 서민 공동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의 건설비와 난방비를 절감하였다. 동시에 옛 군사 주둔지의 나무들도 가능한 한 그대로 두어, 개 · 보수된 서민 공동주택들 사이에 좋은 환경이 되도록 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보봉마을에는 민간의 개발과 병행해서 학교, 유치원, 시장, 그리고 여가와 놀이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갖춰졌다. 이곳에 들어선 건물들은 지붕을 통해 빗물의 일부를 흡수, 저장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적 관점에서 옥상 조경이 이뤄졌고, 빗물을 지하로 모을 수 있는 배수체계와 저장탱크도 갖춰졌다. 또한 과거 군사시설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정화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보봉마을의 주거단지에는 자동차 통행이 없다. 많은 가정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으며, 개인소유의 차량들은 주거단지 입구의 공동 주차장에 세워진다.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주택구매나 임대 시 주차장에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은 '차량 없는 삶을 위한 주민모임(Association for Car-Free Living)'과의 협약을 통해 1년간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무료 이용, 기차표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카셰어링(car-sharing)도 이용할 수 있다. 2006년에 이곳에 새 전차 노선이 개설된 후, 70% 이상의 주민들이 자동차 대신 전차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보봉마을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보봉마을의 거리 이름은 주민들이 직접 정하였고, 포럼 보봉의 토론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과 물 소비를 최소화하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와 마을의 각종 편의시설을 배치할 때 보행권을 기초로 계획함으로써 녹색교통을 실현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보봉 마을은 조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보봉마을 사례는 친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많은 군부대 주둔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지역의 개발과 그에 따른



새로운 건설수요가 늘어날 것은 예상하면서도 정작 현재 군 주둔지역의 공동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지역은 지역경제가 군부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이동은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면에서 보봉마을은 통일 후 군부대의 이동으로 인해 남겨질 군사 시설을 잘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주거지역 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재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훌륭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양구. 2010. 보봉 마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환경정보, JULY/AUGUST.

심재헌. 2014. 에너지 자립형 공동체, 獨 보봉. 지역과 발전, Vol.15.

http://www.freiburg.de/pb/,Lde/208732.html

‘전통’과 ‘미래’를 잇는 내포(內浦)의 중심도시 홍성



▲ 홍주 성 내에 있는 여하정

1914년 일제 강점기 때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 홍성의 옛 이름은 홍주(洪州)였다. 홍주와 공주의 일본식 발음이 비슷해서 ‘홍주’를 ‘홍성’으로 바꿨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은 홍주의병 등 그 어느 지역보다 항일의식이 높았던 지역의 특성을 희석시키고자 일제가 지명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전해진다.

홍주는 고려시대부터 서해안권의 행정 · 교통의 중심지로서 번성하였으며, 고종 32년인 1895년에는 현재의 평택부터 서천에 이르는 22개 군현을 관할하기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서는 “홍주는 호서의 거읍(巨邑)이고 그 땅이 넓고 기름지며, 그 백성이 번성”하다고 적고 있다.

홍성은 이처럼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 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기에, 서해안지역을 일컫는 내포권역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고 있다. 매년 9월에

홍성내포축제가 열리고 있고, 충남도의 새로운 행정 중심이 될 도청 이전(내포)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이 홍성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은, 어쩌면 역사적 전통을 발판삼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꿈꾸는 홍성의 오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인지도 모른다.

충절의 역사를 담고 있는 홍주성



▲ 홍주성(사적 제 231호) 성벽

홍성관광의 첫 코스는 대게 군청에서부터 시작된다. 딱딱하고 천편일률적일 것만 같은 관공서가 홍성관광의 서두를 장식하는 것은, 군청이 홍주성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관아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흔치 않기도 하거니와, 홍성은 특히나 군청과 조선시대 관아가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곳이다. 관아의 출입문인 '홍주아문'과 동헌인 '안회당', 홍주목사가 휴식을 취했다는 '여하정' 등 3개의 건축물이 현존하며, 군청을 호위하듯 서있는 고목(古木)의 당당한 자태와 여하정 주변의 잘 가꿔진 정원도 아름답다.

그리고 홍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충절의 고장이다. 고려충신 무인공 최영 장군, 조선 충신 매죽헌 성삼문 선생,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 무장독립투쟁사에 한 획을 그은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충절의 역사인물을 배출했으며, 구한말 일제의 침탈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난 홍주의병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강점기에 일제는 홍주성의 성곽을 부수며, 서문과 북문을 철폐하고 동문인 조양문마저 철폐하려 하였으나, 당시 홍성백성들의 강경한 반대로 조양문을 지켜낼 수 있었고, 성곽도 완전히 훼손되는 것을 막아 전체 1,772m 중 현재까지 약 8백여m가 남아 천년도시 홍성의 면모를 지켜주고 있다.

현재 홍성군에서는 홍성 홍주읍성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5월에는 홍주성 내에 홍주성역사관을 개관하였고, 홍주성역사공원 조성, 남문과 옥사 복원 등 착실히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또한 홍주성복원사업과 맞물려 현재 홍주성 내 문화재구역에 거주중인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찬란한 천년 홍주 역사의 창조적 복원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 만해 한용운의 생가



▲ 고암 이응노생가기념관

인물의 고장, 홍성

홍성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역사 위인들을 많이 배출했다. 홍성 출신의 많은 역사 인물들을 살펴보면 유독 충절의 인물과 예술인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산리 전투에 빛나는 백야 김좌진 장군과 민족대표 만해 한용운 선사를 비롯해, 백여 년의 시차를 두고 한 곳에서 태어난 고려말 충신 최영 장군과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삼문 선생, 노론의 영수로 후일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남당 한원진, 홍주의병을 이끈 지산 김복한 등이 전자라면, 민족시인으로서 한용운 선사, 판소리의 시조 최선달, 한국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 한국 근대화단의 거목 고암 이응노 화백 등이 후자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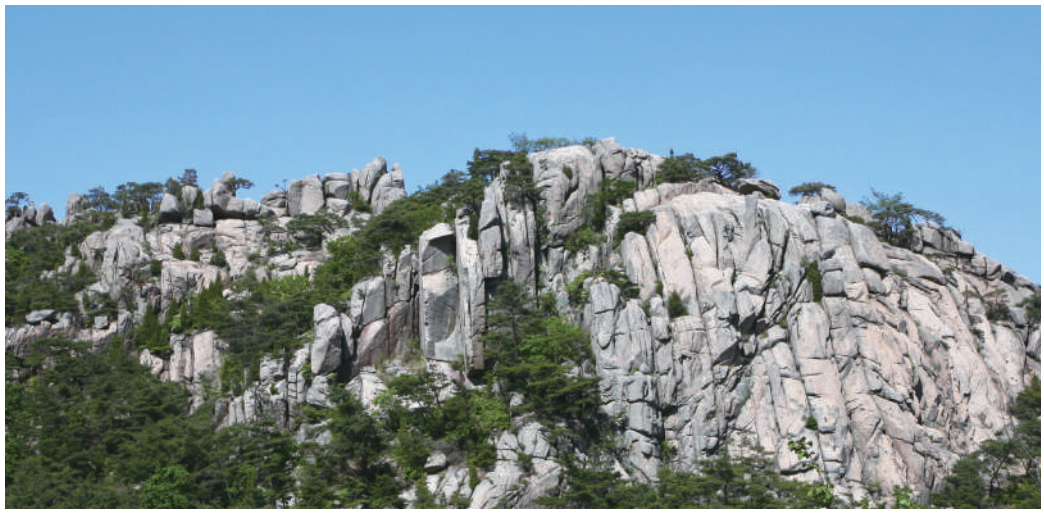
이중 최영장군과 성삼문 선생의 유허지(遺墟地)는 함께 둘러 볼 수 있으며,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사,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는 복원되어 기념관이 함께 건립되어 있다. 특히 2011년 개관한 이응노생가기념관은 지난 2013년 국내 건축계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건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세계를 조명한 기념관 전시물과 함께 새로운 지역의 명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홍성은 전국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역사인물의 고장인 만큼, 홍성이 배출한 위인들의 흔적을 쫓아도 훌륭한 역사교육이 될 수 있을 터이다.

산과 바다가 멋스럽게 만나는 곳, 그리고 맛있는 홍성

홍성의 자연은 뽐내지 않는 조용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수한 멋을 풍기는 산과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 홍성이다. 홍성을 대표하는 산으로는 용봉산과 오서산이 있다.

용봉산은 해발 381m의 높지 않은 산임에도 수석전시장이라도 온 듯하게 갖가지



▲ 기암괴석이 장관인 용봉산

기암괴석들이 산행객들을 맞아 준다. 홍성 사람들은 용봉산의 아름다움을 칭하며 '제2의 금강산'이라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게다가 웅장한 산이 아니니, 천천히 올라도 2시간 정도의 산행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어 가족단위의 산행에도 제격이다. 정상에서는 홍성과 예산의 평야지대가 굽어보이고, 바로 아래쪽에서는 충남도청을 비롯한 도교육청, 도경찰청이 자리잡고 지금도 한창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내포신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

홍성의 또 다른 명산인 오서산은 해발 791m로 서해최고봉이다. 하나의 산자락이 정상까지 죽 이어진 형태의 산은 용봉산 같은 아기자기한 맛은 없지만 단순한 멋을 품고 있다. 정상에 오르면 서해안의 최고봉답게 인근의 산과 들판을 굽어볼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안의 바다와 작은 섬들을 보는 전망도 좋다. 하지만 오서산 산행의 키포인트는 가을철 산 정상부근을 수놓는 억새의 물결이다. 9부 능선부터 시작하는 억새밭은 약 2km가량 이어져 가을이면 많은 산행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매년 10월경에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가 개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오서산까지 갔다면 그냥은 지나칠 수 없는 3가지 특산품인 광천토굴새우젓과 광천김, 남당항의 대하를 만나야 한다. 광천읍 독배마을 야산에는 30여 개의 토굴이 있어 이곳에서 숙성된 새우젓 등의 젓갈이 여전히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천 토굴은 1년 내내 섭씨 15도 내외의 일정한 온도로 젓갈발효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여기서 나오는 광천토굴새우젓을 맛보기 위해 미식가는 물론 김장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광천김도 오랜




▲ 홍성의 특산물인 새조개와 대하

전통만큼이나 높은 품질로 전국 주부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매년 가을이면 광천 독배마을이나 광천전통시장 일원에서 새우젓광천김 대축제가 열린다. 그리고 남당항은 대하축제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고, 매년 가을 대하철이 되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파로 북적이곤 하는 명소다.

홍성의 바다는 안면도가 앞에 놓여 있어 탁 트인 맛은 없지만, 남당항, 궁리포구, 어사리포구 등지에서는 고즈넉한 어촌의 풍경과 갯벌, 무엇보다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해산물이 풍부해 일년 내내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홍성 바닷가 맛의 향연은 일년 내내 계속된다. 매년 1월 중순 본격적인 새조개 철이 열린다. 새조개는 새의 부리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끓는 물에 살짝 익혀 먹으면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봄철에는 바지락과 주꾸미가 제철이다. 살이 통통하고 굵어지는 바지락과 주꾸미는 봄철 홍성바닷가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 가을이 되면 대하가 한창이다. 남당항의 대하축제는 매년 9월경에 개최되는데, 소금구이 대하요리는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맛이다.

홍성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도 풍부하지만, 전국 최고의 축산생산기반을 갖춘 축산군이다. 홍성한우의 탁월한 맛은 물론, 기회가 된다면 홍성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중인 홍성생햄 '벨라몽'의 맛도 빼놓지 말아야할 아이템이다.

오래된 미래를 열어가는 친환경농업의 메카 홍성

홍성군 홍동면의 문당리라는 작은 마을은 연간 2만여 명의 도시민과 농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뛰어난 풍광도, 입맛을 확 돋우는 특산물도 없는 그저 평범하기만 한 농촌마을을 찾는 이들은 '오래된 미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홍동 문당리는 삼십여 년 전부터 유기농 쌀을 생산했던 곳이다. 증산이 농촌의 지상과제였던 시대에 시작된 친환경 농업, 그래서 사람들은 홍성 홍동면을 가리켜 친환경 농업의 메카라고 부른다. 작은 마을이지만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집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각급 학교가 있으며, 출판사, 빵집, 비누공장,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술집과 학생들을 위한 만화방 등 시골마을에서 만나기 어려운 색다른 시설과 각종 주민조직 등 이제는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관심과 능력에 따라 각종 생산자 조직과 생협, 교육조직 등이 얽혀있는 풀뿌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되는 유기농 쌀



▲ 유기농법 재배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홍성

옛 선조들이 이웃해 살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친환경적인 생산과 생태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웃들이 함께하는 '오래된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홍성 홍동이다. 군에서는 최근 지역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홍동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군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민선5기인 지난 2012년에 출범시킨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은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지역 여건에 걸맞은 농정시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며, FTA 등으로 인한 개방의 파고에 적절히 대응하며 하나둘씩 의미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효과는 물론,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홍성군청 공무원은 물론 관내 각 농민단체, 농촌체험마을 대표 등 민간 자원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홍성통'은 정부 3.0시대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리 :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조직분석진단센터 소장)

제21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14년 10월 15일(수)~16일(목) 14:00~18: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 16일 목요일 · 20일 월요일, 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제21차 연구심의위원회(안전행정부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회 및 중간점검 회의, 수탁용역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제20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9:30~10:2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세미나실
주　　제 / 정부3.0과 연구(원)정보의 공개 방향
발　　표 / 안영훈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연구원 2층 세미나실(중앙)에서 '제20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정부3.0과 연구(원)정보의 공개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2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14년 10월 24일(금)~27일(월) 14:00~18: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과 27일 월요일 이틀간, 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제22차 연구심의위원회(기본연구과제 보완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1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 개최



일　　시 / 2014년 10월 30일(목) 9:30~10:3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층 세미나실
주　　제 / 지방관리도로 교통안전사업 범칙금 활용방안
발　　표 / 박진경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 '제21차 정책아이디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방관리도로 교통안전사업 범칙금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4차 KRILA 자치포럼 개최



일　　시 / 2014년 11월 3일(월) 15:00~16: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제 /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 역사와 제도, 현실, 그리고 발전방향
발　　표 /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4차 KRILA 자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 역사와 제도, 현실, 그리고 발전방향 –'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제23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14년 11월 3일(월)~6일(목) 14:00~18: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1월 3일 월요일과 6일 목요일 이틀간,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23차 연구심의위원회(안전행정부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회 및 광역시 · 도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서산시 정책개발 워크숍 동정



일　　시 / 2014년 11월 4일(화)~5일(수)
장　　소 / 천안 상록리조트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산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남원시 MOU 체결 및 2014년 창의혁신대회 개최



일　　시 / 2014년 11월 13일(목)~14일(금)
장　　소 / 남원시청, 천안 상록리조트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산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남원시는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남원시청에서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2015년도 연구부서 사업계획 발표 등을 위한 창의혁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4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13:20~16:4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연구원 5층 세미나실에서 '제24차 연구심의위원회(연구자료집 및 수탁용역연구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14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14:00~18:00
장　　소 / THE-K호텔 서울, 한강홀
주　　제 / 한 · 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서울신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1월 20일 THE-K호텔 서울 한강홀에서 「한·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4:00~17: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주　　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주　　최 / 국회의원 강창일 · 김우남 · 김재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11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발간물



● **「지방자치 Focus」 제86호 발간**

제목 / 공공정책의 생태계 조성 전략과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적 적용

저자 / 전대욱 ·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지방자치 Focus」 제87호 발간**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저자 / 이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김유숙/ 02-3488-7353]

● **하반기 교육일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정부3.0	3일(비합숙) (19시간)	제1기 8. 27(수) ~ 8. 29(금) 제2기 10. 6(월) ~ 10. 8(수) 제3기 11. 19(수) ~ 11. 21(금)
지역통계활성화	3일(비합숙) (21시간)	제1기 9. 3(수) ~ 9. 5(금) 제2기 10. 22(수) ~ 10. 24(금) 제3기 12. 3(수) ~ 12. 5(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3일(비합숙) (21시간)	제4기 9. 10(수) ~ 9. 12(금) 제5기 10. 29(수) ~ 10. 31(금) 제6기 11. 26(수) ~ 11. 28(금)
주민행복 마을 만들기	3일(비합숙) (21시간)	제5기 9. 17(수) ~ 9. 19(금) 제6기 10. 15(수) ~ 10. 17(금) 제7기 11. 12(수) ~ 11. 14(금)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3일(비합숙) (21시간)	제4기 9. 24(수) ~ 9. 26(금) 제5기 11. 12(수) ~ 11. 14(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 실천포럼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ww.molit.go.kr

100만 세입자와 함께 합니다!

월세 지원하는 주거급여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131만원→173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 만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64	109	141	173	205	237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시행 시기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시행시기는(신청시기)는 별도 홍보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www.creativekorea.or.kr

미래창조과학부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하세요!

국민의 아이디어에 실현가능성을 맞추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주는 **창조경제타운**!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금 바로 **창조경제타운**을 **검색**해 보세요!

검색

창조경제타운 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분들에게 멘토링을 연결시켜주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www.krila.re.kr